靑 “방미성과 설명” 野 “교과서 국정화 따질 것”

내일 청와대 ‘5자 회동’ 세부 의제 놓고 입장차

3자→5자 진통 끝 확정
여야 대치정국 해소 분수령
노동개혁 등도 이견 클 듯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5자 회동’을 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회동하는 것은 지난 3월17일 이후 7개월 만이다. 당시 회동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 대표, 새정치연합 문 대표간 3자 회동 형식으로 이뤄졌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 회동이 진통 끝에 성사됨에 따라 이번 회동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발표 이후 형성된 여야간 대치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야당이 회동 의제와 관련해선 강조점을 달리함에 따라 노동개혁 법안 및 역사 교과서 문제 등 세부 의제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 설명과 더불어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조속 처리,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 등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야당은 역사교과서를 포함한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번 회동에서는 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 설명과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관련 5법,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 수출 효과가 큰 한-중 FTA와 한-베트남 및 한-뉴질랜드 FTA 등의 조속한 국회 비준, 그리고 내년 예산의 법정 시한내 처리, 기타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이번 회동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생산적인 운영이 되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번 회동에선) 특히 역사교과서 문제와 민생경제 현안, 노동개혁,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잘 해 봅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0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16회 세계지식포럼에서 대화하고 있다. 〈매일경제 제공〉

정의화 “교과서 국정화 진행 과정 문제”

관훈클럽 토론회…“개헌 통해 권력구조 개편해야”

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 대해 “절차를 제대로 밟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고 평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총무 이선근) 초청 토론회에서 “국정이냐 검정으로 가느냐의 문제보다 논의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정 의장은 정부의 고시 절차를 중단하라고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은 해 본 적도 없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조금 늦기는 했지만,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절차)을 바로 잡을 수 있다면 바로 잡을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통합을 이끌어내는 쪽으로 정책을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어 현행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와 관련,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분권형으로 개편하고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의 국회의원 선거제를 도입함으로써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정치의 틀을 결정짓는 권력구조, 선거제도, 공천제도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개헌을 통해 권력 구조를 분권과 협치가 가능하도록 바꾸고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욕구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제도와 관련, 정 의장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늦었다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제도를 개선하고, 현재의 의원 정수 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게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 법사위 ‘사법시험 존치 법안’ 논의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등 5개 안건 상정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20일 국회에 정식 상정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이른바 ‘사시 존치’ 법안 5개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사시 존치법’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정식 논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17년으로 예정된 사시 폐지를 앞두고 관련 논란이 본격 점화되게 됐다.

새누리당 김학용·노철래·김용남·오신환·함진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들 개정안은 2017년으로 정해진 사시의 존치 시한을 폐지, 로스쿨과 사시로 이원화된 현행 법조인 양성체제를 향후에도 유지하는 내용을 공통점으로 하고 있다.

법사위는 상정된 개정안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려 전체회의 상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시 존치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들 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개정안이 19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친박 속속 복귀…새누리 총선 파워게임 본격화

장관 둘 이어 윤상현·김재원 복귀, 최경환·황우여도 초읽기
경선 방식·전략공천 여부 등 공천룰 싸움 새국면

잠시 여의도를 떠났던 새누리당 친박(친 박근혜)계 장관들과 대통령 정무특보가 복귀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내 파워게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청와대 관계자는 새누리당 윤상현, 김재원 의원이 최근 정무특보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했던 이들은 귀국 직후인 전날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특보직을 겸임하면서 당에 대한 목소리를 자제했던 윤, 김 두 특보의 사의는 이달 들어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청와대 비서관과 일부 정치인 장관에 대한 인사 및 개각을 통해 일찌감치 ‘교통정리’에 들어간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유기준 해양수산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로 돌아왔다.

이에 따라 경선 방식과 전략공천 여부 등 총선 공천룰 논의도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계파 분포에서나 중량감에서 비박(비 박근혜)계와 비교해 열세를 보였던 친박계가 두터워지면서 권력 지형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번 개각에 포함된 두 장관은 후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취임하는 약 3주 후인 11월 초 의정 활동을 본격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귀환도 ‘초읽기’에 들어가 내달 이후 연말에 접어들면 친박계가 이들을 중심으로 확실한 구심점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친박계 의원은 “장관들이 돌아오는 대로 공천 방식과 선거구 획정 등 공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면서 “공천 방식은 새롭게 바꾸려 하면 갈등만 키우기 때문에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확정한 당헌·당규를 적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때마침 최근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방식과 관련,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하고 국민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 사실상 김무성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계파 간 전선이 점차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공교롭게 김 대표와 유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정윤회 비선실세 문건’ 사태가 터졌을 때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던 이른바 ‘K-Y 라인’의 당사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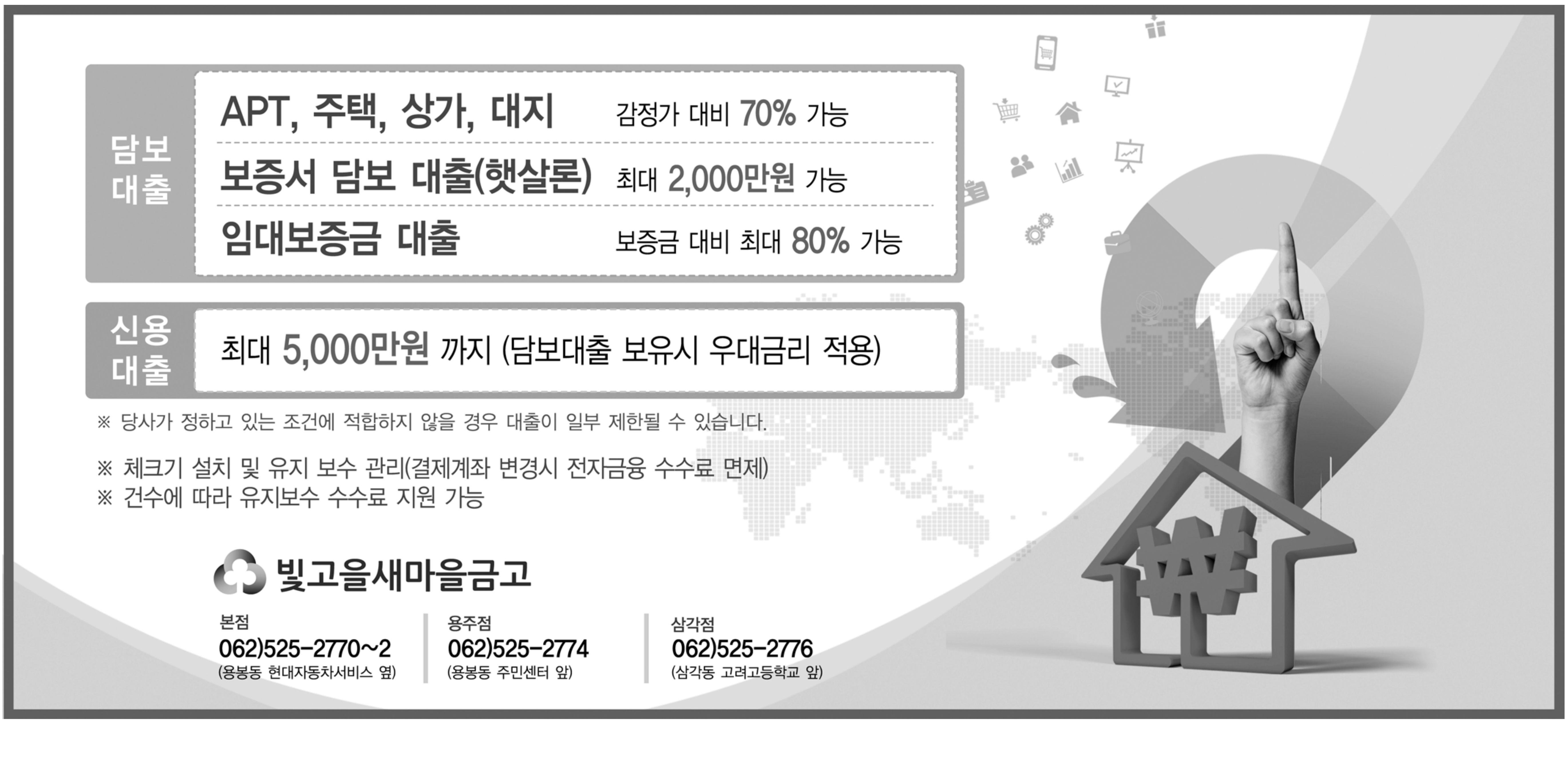
안철수 의원 오늘 광주 방문 전남대 특강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21일 광주를 방문한다.

안 의원은 이날 광주 광천동 유스퀘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의 ‘역사교과서 검정화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뒤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전남대로 자리를 옮겨 전남대 용지관 3층 광주은행홀에서 특강을 한다.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CEO 및 명사초청’ 특강 시리즈 3번째 행사로, 안 의원은 이날 ‘공정성장’을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강연한다.

안 의원은 최근 강연·좌담회 등을 통해 ‘공정성장’을 키워드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